

사회정의 및 복지운동 단체의 구조와 활동*

임현진** · 공석기***

본 연구는 한국의 현 신사회운동단체들의 발전경험과 연대활동상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신사회운동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이를 몇 개의 하위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즉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을 제외한 사회정의 및 복지운동을 표방하는 사회운동단체들을 몇 개의 하위범주로 나누어 이들의 발전과정과 조직특성을 주제로 살펴보았다.

조직특성을 알아내기 위하여 이들이 어떤 연대활동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는 운동부문내의 내적인 연결망, 운동부문간의 연결망, 구사회운동파의 연결망, 그리고 외부환경파의 연결망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다. 동시에 이러한 분석에서 한국의 사회정의 및 복지운동단체들이 연대활동에서 신사회운동적인 특성의 정도와 구사회운동파의 단절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의 사회운동단체들은 IMF 체제의 대두에 따른 경제적인 압박과, 운동영역의 전지구적 차원으로의 확대에 따른 정책 형성과 구현의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연대활동의 문제, 운동의 급진화 및 제도화의 문제 그리고 운동의 중첩성의 문제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단지 규모와 활동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한정될 수 없다. 가장 근본에 있는 것은 결국 운동단체가 스스로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 가라는 질문이다.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과학 분야 중점 영역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주요 관심분야는 비교사회학, 사회발전론 등. 주요저서 및 논문에 『지구 시대 세계의 변화와 한국의 발전』(1998), 『미국과 멕시코의 환경문제와 발전전략 — 비만형과 빈곤형의 연관』(1996) 등이 있다(연락처: 02-880-6412, E-mail: isdpr@rome.snu.ac.kr).

***하버드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주요 관심분야는 정치사회학, 사회운동론 등. 주요논문에 "1990년 대 한국 사회운동조직에 대한 경험적 연구" (1997) 등이 있다(E-mail: skong@fas.harvard.edu).

1. 문제의 제기

사회운동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운동의 목표와 가치, 활동, 구성원의 변화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른바 신사회운동은 과거 주변적인 것으로 여겼던 문제들에 대한 재인식을 전제로 그 중요성이 새롭게 평가되는 사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환경운동과 여성운동이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생활상의 요구와 관련된 삶의 질 추구노력은 의료보건개혁운동, 소비자운동, 교통운동, 교육 개혁운동 등으로 나타났다. 이 영역의 운동은 어느 한 계급이나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탈계급적인 공공선(public good)을 위한 것들이다. 사실 환경운동과 여성운동을 제외하면 이 부문은 매우 포괄적인 운동영역으로 남게 되어, 신사회운동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구사회운동적인 특징도 지니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인권운동(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과 복지운동(다양한 복지관련 운동단체를 포함)을 어느 하나로 포괄하여 다루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근거는 운동단체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환경보존과 여성의 권리보호라는 명백한 운동목표와 비교하면 이 부문은 어느 하나로 운동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운동목표를 동시에 상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운동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몇몇 인권운동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운동단체가 서너 개의 운동목표를 상정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의 운동단체들이 운동방식에서는 새로울 수 있지만, 운동목표 부문에 있어서는 과거운동에 상당 부분 걸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본 장은,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을 제외한 사회정의 및 복지운동단체로 포괄될 수 있는 운동단체들을 몇 개의 하위범주로 나누고 이를 대상으로 이들의 발전과정과 조직특성을 보고자 한다. 또한 조직활동에 있어서는 운동단체들이 어떤 연대활동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 연대활동 분석을 몇 가지로 나누어 시도하였는데, 그 하나가 운동부문내의 내적인 연결망, 운동부문 간의 연결망, 구사회운동과의 연결망, 그리고 외부환경과의 연결망 등이다. 이를 통해 사회정의 및 복지운동단체들이 연대활동에 있어서 신사회운동적 특성을 얼마

나 보여주고, 구사회운동과는 어느 정도 단절적인 모습을 보이는 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운동단체간의 연결망을 보기 위해서는 각 운동부문이 어떤 발전경험을 보여 왔으며, 어떤 단체들이 연대활동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부문의 핵심단체들에 대한 발전경험을 시계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연구분석은 여성운동, 환경운동을 제외한 신사회운동단체들에 대한 분석이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이유로 이른바 사회정의 및 복지운동을 표방하는 운동단체들에 대해 몇 개의 하위부문을 나누어 각각의 발전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이 부문들이 보이는 연대활동상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주 목적이 있다.

2. 조사대상 개관

1) 조사 범주

사회정의 및 복지운동 단체로 범주화시켰을 때 포함되지 않는 운동단체가 없을 정도로 이 범주는 매우 포괄적이다. 여성운동은 상대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킨다는 운동목표하에 회원의 90% 이상이 여성인 경우에 해당되는 단체만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부여하는 평판점수(reputation scale)를 통하여 최종 표본을 추출할 수 있었다. 한편 환경운동의 경우는 환경보존이라는 운동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운동단체들에 대해서 중앙과 지역을 고려한 후에 그 평판점수를 토대로 표본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정의 및 복지운동 단체의 경우는 정확히 정의할 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못했다. 예컨대, 운동목표의 경우에는 운동단체들이 복수의 운동목표(의식계몽, 민중의 권리보호, 인권보호, 소비자 보호, 장애인 복지 등)를 상정하고 있어서 어떤 하나의 목표에 수렴하는 운동단체들을 묶어내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몇 개의 하위범주를 만들었고, 그것을 토대로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을 대안으로 삼았다. 그 하위범주를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인권운동부문이다. 본 조사에서는 이 부분을 사회정의의 측면에서 인권보호라는 구체적인 운동목표를 상정한 운동단체에 국한시켰다. 그러나 이 단체들 대부분이 인권보호만을 목

표로 하지 않고 있으며, 이외에도 복수의 운동목표를 상정하고 있다. 예컨대, 의식개혁, 환경보존, 여성권리신장, 민족통일 등을 추가로 상정하고 있다. 사실 그 우위성을 어디에 두는가는 사업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¹⁾

다음으로 복지운동부문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란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다양한 하위범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운동단체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생활상의 구체적인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단체로 한정지웠다. 예컨대, 의료, 교육, 주거, 교통, 소비자 등의 구체적인 생활상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운동단체는 그 최종적인 목표를 새로운 가치체계와 의미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시민의식 고취와 삶의 질의 고양에 두고 있다.²⁾

마지막으로 우리 운동사의 특수한 측면을 보여주는 종합운동단체를 들 수 있다. 이에는 새로운 이슈로의 전환과 과거 민주화 운동사이에 걸쳐 있으면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운동단체가 해당된다. 이 범주의 운동단체들은 다양한 운동목표를 상정하면서 이슈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른바 '운동의 종합화'를 추구한다. 즉, 의식계몽에서 시작하여, 환경보존, 합리적 대안을 통한 개혁운동,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이슈에 대하여 광범위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운동단체들이다. 또한 이러한 운동의 종합화는 중앙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는 지역에서도 비슷한 운동단체들이 출현하고 있다. 대표적인 종합운동단체를 예시하자면, YMCA, 경실련, 참여연대, 흥사단, 기윤실, 지역의 시민운동연합 등이 중앙과 지역에서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운동단체들은 단일운동단체인 경우와 지역조직을 갖춘 연합체 또는 협의체 등의 조직형태를 유지하면서 가장 적극적인 연대

2) 본 조사에서 표본으로 정한 인권운동부문에 해당하는 운동단체는 다음과 같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낙태반대운동연합, 국제인권옹호연맹,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노동인권회관,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장기수가족후원회 포함),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가정법률상담소 등이다.

복지관련운동부문으로 포함된 표본으로는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바른언론을위한시민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생활협동조합중앙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한국유권자운동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시민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교통문화운동본부, 녹색교통운동, 걷고싶은도시만들기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조사되었다.

활동은 이루고 있는 동시에, 운동방식과 활동이 종합화 또는 백화점식 지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³⁾ 현실적으로 사회정의 및 복지운동에서 종합운동단체들이 활동에서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우리사회의 문제가 복합적이고도 동시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인터뷰와 설문지 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우선 앞서 나눈 세 범주에 따라 운동단체에 대한 조직특성을 회원구성, 재정기반, 운동의 전문성 등을 중심으로 각 부문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보이는지 부문별 평균비교(Compare Means Table)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둘째, 각 운동부문(여성, 환경, 사회정의 및 복지 등)이 어떤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운동조직간의 연결망을 통해 분석하였다. 셋째, 각 운동단체가 연대활동을 통해 다른 운동단체나 외부환경(정부, 지자체, 기업, 언론, 정당, 외국기관 등)으로부터 어느 정도 정보는 물론 인적 물적 자원을 교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응답한 단체 중에서 빈도와 강도를 고려하여 사회정의부문, 복지부문, 그리고 종합운동단체의 세 범주안에서의 연결망 지도를 만들어 보았다. 각 연결망 지도는 핵심운동단체(star)와 중심성(centrality)을 기초로 각각의 연결망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것이 구사회운동과 어떤 차별성을 보이는지 실무자와의 인터뷰와 자료집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주로 윈도즈용 SPSS, UCINET III & IV, 그리고 Krackplot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3. 운동부문별 특성 — 부문별 운동단체의 발전경험을 중심으로

사회정의 및 복지운동 부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즉 이 부문이 어떤 발전경로를 거쳐왔으며, 정부를 비롯한 외부환경

3) 본 조사에서 종합운동단체로 범주화시킨 단체로는 한국YMCA전국연맹, 부천YMCA, 홍사단, 경실련, 부산, 수원, 인천, 춘천 등의 지역경실련,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참여연대 등이 있다. 또한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 등도 종합적인 운동단체로 포함시켰다.

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상의 변화를 보여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과정과 밀접히 관련있다. 인권운동은 압제적인 법과 제도에 의한 인권침해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에서부터 최근에는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문제, 여성, 장애인의 인권문제, 그리고 정보통신에서의 개인의 프라이버시까지 그 이슈가 다양해지고 있다. 인권운동 발전의 핵심은 통치나 정치논리에 따라 현존하는 인권침해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의 역사이다. 한편, 복지관련운동단체는 과거의 과속발전의 부산물이 이제는 생활중심의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과정에서 삶의 양과 질의 불균등을 바로 잡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그리고 운동단체들은 보다 다양한 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예컨대, 교육문제는 모든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복잡한 문제이며 이는 더 이상 몇몇 정부의 탁상공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문제이다. 최근에는 학부모들이 나서서 교육문제를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풀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학부모-교사-학생의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다. 또한 교통문제, 보건의료문제, 소비자, 주거 문제 등은 일반 시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입장에 머물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과거에는 YMCA, YWCA 등을 중심으로 한 의식개혁 및 계몽운동의 관점에서 일반시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여기는 차원으로부터, 일반시민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파악하는 차원으로 운동양상이 발전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련 운동단체에서 주부의 역할과 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중산층의 참여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종합운동단체는 1990년대 들어 민주화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인 운동부문이다. 정부의 개혁정책을 견제, 비판하면서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관심과 참여의 폭을 비약적으로 확대시켰다. 그러나 중앙과 지역의 운동단체간의 운동발전 정도가 달랐으며, 종합적인 운동을 지향하는 운동단체들도 몇몇 핵심단체가 주도하는 운동으로 나아가는 이른바 운동패권주의적 양태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양산되는 우리 현실에 운동단체들은 아직까지 종합적인 운동을 지향할 수밖에 없으며, 새로운 이슈에 따라 자신의 운동영역을 확대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세부문의 운동발전 추세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으로 각 부문에서 어떤 운동단체들이 핵심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성장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운동부문별 과거의 운동흐름에 대한 검토는 오늘날의 운동진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1) 인권운동단체

사실 인권운동은 우리의 인권현실의 개선정도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했듯이 우리 인권상황은 엄청난 변화를 보였지만,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문이 많음을 몇몇 인권운동단체의 주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제의 강점시기의 인간이하의 취급, 해방이후의 국가분열과 전쟁으로 인한 동족상잔의 비극, 그리고 이승만 정권부터 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정권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법적 도구를 만들었으며 이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이승만 정권 시절 1948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당시 수감자 60,000명 중 50~60%를 감옥에 있게 한 법적 근거였다. 박정희 독재정권 시기인 1961년에 만들어진 반공법, 1975년의 긴급조치 9호, 그리고 유신헌법 등은 모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들이었다. 전두환 정권의 배경이 된 광주학살, 그리고 노태우 정권의 국가보안법 등은 아직도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를 억압할 수 있는 법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도 별 차이가 없었으며 1996년 당시 1,570명이라는 양심수가 여전히 감옥신세를 지고 있는 현실이다. 1996년에 있었던 역사바로세우기는 인권기준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두 전직대통령과 극소수의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로 끝나고 말았다. 후자는 이는 정치보복적인 전략이며 단순한 정치적 쇼로 평가절하하였다. 왜냐하면 무죄, 희생자에 대한 어떤 배려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끝났으며, 또한 이것은 주도면밀하게 청와대위주의 독점적 진행과 정치적 시나리오에 따라 야당과 사회운동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이 배제되는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역사바로세우기였기 때문이다. 과거청산의 문제와 인권의 문제는 결코 위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풀뿌리 수준의 시민의 공감대와 참여를 전제한 지속적인 과정이어야 한다. 역사바로세우기는 결실없이 허탈한 마음만을 남기게 했던 것이다.⁴⁾

이렇게 일반 시민이 배제된 인권운동 또는 과거 청산노력은 인권운동 단체들이

4) 인권운동사랑방, 『1996년 한국의 인권상황 보고서』.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게 했다. 인권을 누르는 압제적인 법체계 — 국가보안법, 보호감찰법, 노동관련법 등⁵⁾ — 가 엄연하게 존재하며, 이것이 지속적으로 양심수와 장기수의 수적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1995년 12월 5일 민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YS정권 이후 1,570명의 양심수와 763명의 국보법 위반자, 그리고 195명이 정치적 이유로 수감중인 것으로 나타났다.⁶⁾ 이는 한국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반인권적인 처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결과적으로 인권운동의 역사도 이러한 인권침해를 막기위한 인권침해 고발운동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대응운동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시퍼런 독재정권 시기에서는 몇몇 종교단체, 특히 천주교가 그 뜻을 톡톡히 해왔다. 현재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인권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도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종교계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타, 실천불교승가회, 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등이 인권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지식인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다. 과거에는 몇몇 지식인의 혼신적인 활동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보다 전문적인 법적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이 인권운동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이라는 체계화된 조직을 갖추면서 참여변호사의 수도 꾸준한 증가를 보였고, 이제는 인권운동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운동단체로 자리잡았다. 물론 변호사라는 특수한 지위에서 생기는 활동의 영향력도 있지만, 인권을 침해받는 사람들의 볼멘 목소리보다는 합리적인 법적대안을 가진 이들의 주장은 보

5) 국가보안법은 1948년에 공포된 이후, 7차례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막연하고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어 악용의 소지가 높은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보호감찰법은 피보호감찰자로 하여금 3개월마다 인근 경찰서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으로서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엄연한 인권침해 법규이다. 이는 또하나의 벽없는 감옥을 만들어 내는 것에 불과하다. 노동관련법은 김대중 국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노동관련법규의 개선차원에서 변모하고 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교조 합법화 등이 예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 기초법처럼 이미 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많다. 이는 실질적인 인권개선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6)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1998년 정기총회 자료집 참조.

다 설득력이 있었으며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다 사회의 다양한 부문과 연대활동을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운동단체와의 강한 연결망을 이루고 있다.

인권부문에서 가장 실천적인 운동단체를 꼽는다면 단연코 민가협을 들 수 있다. 양심수나 장기수를 둔 가족이 주로 회원이 되어 꾸준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로서 일반 시민들에게 한국의 인권현실을 알리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종교계의 후원과 민변소속의 변호사의 합리적인 대안제시, 그리고 이 민가협의 적극적인 실천력이 바로 우리 인권운동의 뚜렷한 모습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외에도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이 단체는 소수의 인권운동전문가들이 새로운 매체 — 통신공간, 인터넷, 팩스 — 를 통해 인권현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는 모임이다. 앞으로 통신공간을 통한 인권운동은 국제적인 연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주요 인권문제의 또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와 처사에 있다. 최근에는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외국인의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여 25만 명에 달했다. 사실 한국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연수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연수생과 불법체류자의 임금격차가 발생하게 되어 작업장을 이탈하는 연수생이 늘어나고 이를 막기위한 비인간적인 처사를 저지르는 고용주가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예컨대, 고용주들은 전화통화금지, 여권압수, 6개월 근무 후 임금지급, 체인 또는 수갑을 채운 후 굶기고, 학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1995년 1월 네팔인 8명이 명동성당에서 벌인 파업농성은 이런 처사를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부분이 추방을 두려워해 이런 비인간적인 처사를 당국에 고발하지 못하고 이런 인권침해를 감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의 IMF 사태 이후,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자 불법 체류자는 범칙금마저 내지 못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정부는 비합리적인 외국인 연수생제도와 범칙금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이른 시일 내에 정비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반발을 살지도 모른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운동단체들이 90년대 들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부천, 성남지역의 외국인노동자의 집이 생겼으며, 서울에는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가 95년에 설립되어, 외국인노동자의 균로조건 개선

을 위하여 입법청원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단체는 주로 기독교, 가톨릭, 불교의 후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이 부문을 인권운동으로 포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간이하의 생활을 돋기 위한 범국민적인 구호활동을 들 수 있다. 동포애적인 차원에서 모든 운동단체들이 참여한 결과 엄청난 모금성과를 이루고 있다.

2) 복지운동단체

과거 운동의 주변부를 차지하던 부문이 이제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 전 사회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제도정비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더 나아가 일상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시민이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약하다. 그 결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의 노력은 다양한 운동단체들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사회복지가 단순히 생존의 위협으로부터의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서 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하는 삶의 질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이와 관련된 일상생활의 문제가 모든 운동의 대상이 되었다. 과행적인 교육문제, 엄청난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폐해, 소비자 주권의 문제, 보건의료문제, 주거개선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슈는 어느 하나로 삶의 질의 향상을 담보할 수 없으나 모두 삶의 질 개선과 사회복지라는 포괄적 개념에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래에 제시된 몇몇 운동단체들의 진영변화와 발전의 모습을 봄으로써 복지운동단체들의 운동의 흐름을 보고자 한다.

〈교통〉 도시연대, 녹색교통운동, 교통문화운동본부

교통문제는 교통난을 해결하는 단순한 문제로 환원할 수 없다. 자동차 100만대 돌파는 기뻐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교통관련 운동단체들도 정책개발을 위주로 하는 연구소 중심의 운동에서 이제는 교통문제 해결의 실제적인 주체인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운동단체들을 들어보면, 우선 교통문화운동본부가 있다. 이 단체는 1980년대 중반, 도시교통연구소로 출발하여 1996년에는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문화운동으로 확

대 개편된 운동단체이다. 이 단체는 캠페인, 세미나, 시민강좌를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의식을 고양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언론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교통문화의식에 주안점을 둔 운동단체와는 달리 교통문제가 곧 환경문제와 연결됨을 인지하고 환경운동과 연결시켜 활동하는 녹색교통운동과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이하 도시연대)가 있다. 녹색교통운동은 1993년에 회원 200명과 상근자 6명의 소규모 조직으로 출발했지만, 1997년 12월 현재 회원 3,000명과 상근자 6명으로 성장하였다. 도시연대는 1994년에 회원 100명, 상근자 3명의 연구소로 출발하였으나 1년 뒤에 시민교통환경센터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교통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고, 도시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직시하고 도시연대로 전환하였다. 이 두 단체는 상대적으로 친화의 정도가 높아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은 택시노동자 완전월급제, 지하철, 철도문제, 지역의 복개천 문제 등이다. 교통문화운동본부가 정부와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에 녹색교통운동과 도시연대는 노동단체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듯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교통문화운동본부, 녹색교통운동, 도시연대는 다소 연대활동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교통문화운동본부가 좀더 관료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있으면서 언론이나 정부단체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도시연대와 녹색교통운동은 이와는 반대의 운동양태를 보이고 있다. 사실 교통운동단체들은 연혁이나 격이 다양하기에 교통이라는 공통의 사안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강한 연결망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교통문제는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주축이 된 연구를 통한 대안운동의 특성을 보인다. 앞으로 전문성을 갖춘 교통운동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학부모연대, 참교육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전교조

전통적으로 교육열이 강한 우리 사회는 올바른 교육제도의 부재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우리 사회가 교육문제만 해결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불완전한 교육제도에 따른 희생이 너무나 크다면서 교육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사교육비의 문제, 대학입학 부정비리, 입시위

주의 교육, 청소년 범죄, 학교폭력, 인간다운 교육의 부재 등이 그 예일 것이다. 1989년 전교조의 결성은 지금껏 간과되어 오던 교육문제를 교사들이 하나된 목소리로 해결하려는 지난한 노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1998년에 국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교조는 합법화의 길을 걷게 되었고, 정부도 과거 관 주도의 교육개혁에서 교육관련 사회운동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대안을 찾으려는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개혁에 있어서 전교조의 기여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국 교사들의 또 하나의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하 교총)이 있다. 교총은 하나의 운동단체이기 보다는 교직원의 권익을 보호,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는 교총이 교육바로세우기 운동협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교육민회 역시 1997년에 해체되는 비슷한 운명을 겪어야 했다.

한편, 1990년대 들어 교육문제에 대해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인간다운 교육을 실현시키고자 운동단체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여성부문으로 포함시킴, 여연의 참관단체), 참교육을 위한 시민모임 등이 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전국에 15개 지부를 가진 조직 형태로서 중앙과 지부가 연계하여 교육정책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학부모연대는 크리스챤아카데미 대화모임에 참가하던 사람 중에 뜻이 맞는 몇몇 사람이 1988년부터 준비하여 1989년의 발기인모임 그리고 1990년 4월에 창립한 단체이다. 이 단체는 교육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타 단체와 연대활동을 하면서도 교육사안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 교육 주력 운동단체이다. 이 단체는 전조교와는 차별성을 보이는데 비교적 온건한 의식개혁 사업이나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공보처, 교육청)과의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의 공동사업의 측면에서 보면 학부모연대는 참교육시민모임과는 다르다. 참교육시민모임은 정부기관과 연대하지 않는 반면에 학부모연대는 공보처의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거나 그 외의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참교육시민모임이 활동방식에서 학부모연대와 다른 것은 그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본래 1989년 전교조 결성이 유로 참여교사들이 해직되자, 그들을 돋고자 '해직교사후원회'를 만들었으며, 그리고 이 교사들이 다시 교단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낙후된 교육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운동으로 참교육시민모임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학부모연대가 기본적으로 교육사안이 아니면 연대

를 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이 단체는 직접적인 교육사안이 아니더라고 넓은 의미에서 교육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단체가 교육운동을 전개할 때 유지하는 연대의 큰 틀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와의 연대를 기본으로 한 삼각구도이며, 그 외의 다른 단체와도 필요하면 연대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규모나 재정이 열악하며 조직정비도 다른 단체보다는 미숙한 상태이다.

요컨대, 교육운동 부문은 전교조와 교총이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학부모연대는 정부와 다양한 연대활동 속에서 의식개혁운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참교육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는 전교조와 긴밀한 연대활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교육개혁운동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생활〉 생활협동조합협의회, 소비협,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과거 소비생활부문은 생계문제에 밀려 주변적인 것이었다. 올바른 소비문화를 위한 계몽운동이나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고취하기 위한 강좌나 캠페인이 고작이었다. 기존의 여성운동단체들 예컨대, 대한어미니회, 주부클럽, 한국부인회 등이 이러한 소극적 수준의 소비생활 운동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식생활문제가 개선되고 다양한 소비패턴이 생겨나면서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았던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소비자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담당하고자 하는 다양한 운동단체가 생겨났다. 소비자의 문제는 결코 여성의 문제가 아니며, 일상생활의 문제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여성운동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 물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운동단체들이 이 부분에 주로 관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운동단체는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다. 생협은 한 동네에서 함께 살고 있거나 같은 직장학교, 종교기관 등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만든 협동조합이다. 농, 수, 축협이 생산자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만든 생산자 협동조합인 반면에 생협은 소비자들의 생명과 권익을 지키는 소비자들의 협동조합이다. 중간 유통업자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에서부터 유해농산물로부터 능동적으로 피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생협은 지역별, 직능별로 모인 연합회와 사업연대를 목적으로 한 사업연합, 그리고 전국적 연대를 위한 생협중앙회가 있

다. 1997년 12월 31일까지 경실련 정농, 녹원, 동부서울, 대전, 한밭살림, 건지골, 부천YMCA, 안양YMCA, 원주한살림, 강릉한살림, 하남한마을, 부남농민, 푸른평화, 새누리 등 전국에 73개의 생협이 있다. 이러한 생협은 지역주민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하나의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역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소비자 주권을 행사한다는 차원에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의 성립과 그 활동을 들 수 있다. 1983년 설립 당시 300명의 회원이 98년 1월 현재 전국에 5개 지부를 둔 45,000명의 회원을 거느린 거대한 운동단체로 성장하였다. 소비자 문제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계층별교육, 상담, 소비자정책 로비활동, 홍보출판 활동을 하는 운동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와도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에너지절약,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연대활동은 주로 소비자보호단체와 하고 있는 반면에, 노동운동단체와는 거의 추진하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 건약, 건치, 인의협

보건의료 부문의 운동단체는 기존의 이익집단(대한의협)과는 달리 사회 민주화와 국민 건강권의 확보라는 '사회공공선'을 추구하려는 의사, 약사, 한의사 등의 전문직업 종사자들이 조직한 단체이다. 그 대표적인 단체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있으며 각각 1990년과 1989년에 설립되었다. 건약은 6개의 지부를 둔 전국조직으로 발전했으며, 약사들의 조직이기 때문에 약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 건치는 1989년에 청년치과의사회와 연세민주치과의사회라는 두 단체가 통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7개의 지부를 둔 전국조직이다. 이 단체는 주로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건의료영역의 연구과제와 국민보건교육사업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일반 의사들의 운동조직인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를 들 수 있다. 이 단체는 1987년 인도주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사들이 187명의 회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1,000여 명에 이르는 전국조직으로 발전하였다. 보건의료단체들 간의 연대활동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8개의 보건의료단체 대표자 회의의 협의체 형식과 의보연대회의가 있다. 이 보건의료부문 단체들은 보건 이외의 다른 단체와도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의료보험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연대

활동,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민변과 기타 인권운동단체와의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의사들의 모임이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청년의사, 민의련, 진보의련, 청한, 기청의, 노건연, 보사연 등이 그것이다. 각각의 운동단체들은 자신의 특성이 있고 그 지향점이 다르지만 중요한 인력의 분산이라는 측면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의료운동단체들의 신입회원이 감소하면서 평상시의 운영이 어려울 지경의 재정상태와 활동회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초기의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기초한 인력동원방식이 소진되고 새로운 이슈와 대안이 희미해지면서 개인적인 사업과 활동을 병행할 수 없는 회원이 많아짐에 따라 조직유지의 어려움을 맞고 있는 것이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모임인 민변과 인의협의 활동을 비교하면 그 차이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물론 노동운동단체와의 연대활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는 의료운동단체들도 있지만, 이들은 비교적 작은 규모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는 수준이다.

〈주거부문〉 주거연합

1998년에도 서울 도시한복판에서는 철거반원과 주민들간의 싸움이 있었다. 비인간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무주택 사람들의 목숨을 건 싸움은 1980년대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었다. 초기에는 목동, 상계동, 사당동의 철거민들의 개별적인 싸움에 머물렀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1990년 6월에 국민주거권 실현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주거문제로 고통받지 않기 위해 설립하였다.

주거연합은 정부의 개발정책이 주로 기업들의 개발이익만을 생각하고 주민들의 생활실정에 맞지 않는 대형아파트만을 세우는 것이기에 대다수의 주민은 이사가야만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그들의 삶의 자리를 파괴하고 주민들의 상부상조하는 지역공동생활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개발정책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주민의 참여가 배제된 채 개발이익만을 쟁기는 기업과 도시재개발이라는 명분만을 추구하는 정부의 입장만이 이 정책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거연합을 비롯한 다수의 관련단체(전국연합, 한국도시연구소 등)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가진다는 환경권에 근거하여 국가가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개발과정에서 저소득 주민을 고려한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국가는 개발

지역 내의 세입자들의 현실적 사정을 고려하여 순환식 개발을 실시하고 임시거주 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철거민들의 주장은 일부에서만 수용될 뿐 많은 지역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3) 종합운동단체

종합적인 운동을 추구하는 운동단체들은 과거에는 주로 의식계몽운동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주변부에 있던 문제가 중심부로 등장하면서 이 단체들은 운동영역을 환경, 소비, 교육, 복지 등으로까지 확장하였다. YMCA의 경우는 1990년대 들어 환경운동을 운동의 중심에 위치시켰고, 흥사단도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으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반면에 1987년 민주화 이후 성립된 경실련, 기윤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참여연대도 운동영역을 설립초기보다 확장시키고 있다. 경실련은 1989년 창립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경실련은 조직정관에 운동목표를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 그리고 환경보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 경실련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개혁의 파트너로서 정부와 사안별로 연대활동을 하면서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 참여라는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핵심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곳은 정책위원회였는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정계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경실련은 지나친 이슈중심의 운동과 소수 전문가들의 정책제안 운동에 머물러 회원은 없고 소수의 운동전문가들의 운동으로 머물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특히 1996년부터는 도시개혁센터와 환경개발센터를 만들어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려고 했지만 1997년 초의 비디오테이프 파동에 연루되어 운동단체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후 경실련은 거듭난다는 각오로 회원을 모든 활동에 중심에 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략을 구상하여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른바 백화점식 운동방식을 견지하여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규모면에서는 1997년까지 42개의 지역경실련을 갖추게 되어 명실상부한 전국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이 지역경실련은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과의

연대활동은 주로 지역경실련에 대한 정책지원에 있다.

기윤실은 1987년 12월에 몇몇 서울대 기독교인 교수가 중심이 되어 창립한 운동단체로 현재 18개 지부와 1만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성장하였다. 이 운동단체는 먼저 기독교인 개개인이 올바른 삶을 살도록 도우며,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교회가 사명을 다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와 국가의 부정과 부패를 개선하는 일을 운동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주요활동이 의식개혁운동에 그 초점을 맞추어 왔다. 예를 들면 정치운동, 문화소비자운동(음란폭력물추방운동), 좋은문화만들기운동, 검소하고 나누는 환경운동, 건강한가정만들기운동 등이 그것이다. 이 윤리운동은 최근에는 환경운동으로 운동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존의 개인윤리에 대한 지나친 강조나 실천주장은 결국 윤리주의나 의식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 앞으로 기윤실은 사회윤리운동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의 전문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기윤실은 앞으로 윤리의 실천자들의 모임이라기 보다는 기독교윤리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비윤리성을 비판하며 개선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⁷⁾

참여연대는 1994년 9월에 설립당시 400명 회원(상근자 12명)에서 97년 12월에는 회원 2,000명, 상근자 30명, 자원활동가 200명 등이 활동하는 종합적 운동단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초기에는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이제는 영역을 확대하여 의정감시, 지방자치, 사회복지, 과학기술, 부정부패척결, 작은권리찾기 등으로 확대하였다. 기존에 경실련이 조직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운동 중심에서 사라졌다라는 운동의 한계를 거울삼아 참여연대는 일반 회원의 참여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하여 회원자치모임을 확대하고 생활실천운동을 통해 회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의 성과여부는 프로그램의 유무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인 관심과 역량을 투입하느냐에 달려 있다. 참여연대 역시 사안중심의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어, 참여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원의 증가도 단발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듯 참여연대는 지금까지의 3년의 성장을 토대로 앞으로의 3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역시 일반 시민이 위치하고 있다. 회원참여에 기반한 실천활동,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원배가운동, 연대활동에 있어서도 상충수준의 연대가 아닌 회원의 실질적

7)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 10주년 활동자료집』, 1997. 참조.

참여가 보장된 풀뿌리수준의 연대활동, 그리고 시민교육의 확대를 통한 동원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⁸⁾ 이러한 목표는 물론 참여연대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종합적인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운동단체들은 바로 시민이 중심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 힘은 곧 소진하게 되므로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운동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본 전제가 되고 있음을 공감하고 있다.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도 종합적인 운동을 추구하는 운동단체들이 있는데, 이는 1990년대 들어 지역수준에서 새롭게 설립된 시민운동연합체이다. 최근 들어 과거의 운동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워진 지역의 이슈(환경, 지역자치, 지역공동체 건설 등)에 대해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운동목표와 전략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한 지역의 운동가와 지식인들이 새로운 운동단체들을 결성하게 되었다. 물론 지역의 핵심인물들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는 없지만, 새로워진 시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지역의 전문가와 지식인들이 결합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연합체는 지역의 중심도시에서 설립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 울산민주시민회, 정의로운사회를위한마산창원시민연합 등이다. 이러한 운동단체들이 아직까지는 지역에서 핵심적인 운동단체로 자리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기존의 유력한 운동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해서 점차 그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은 지역수준에서의 지역사안에 대한 운동단체들간의 연대활동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연대활동의 핵심은 지역자치와 지역의 환경문제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에 맞출 수 있을가에 집중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사회정의 및 복지운동단체들의 흐름이라는 것이 앞서 제시한 범주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종합운동단체들은 설립한지 10년을 맞이하는 것에서부터 오래된 전통을 가진 운동단체들로 그 성격이 다양하다. 현재 이 단체들은 회원의 중심성 확보와 운동의 전문성을 견지하기 위한 거듭나기에 힘쓰고 있다. 연대활동에서 보이는 이슈중심적 활동과 운동의 중첩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각 운동단체가 맞이하는 공통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 각 운동단체들의 발전양태를 보다 간명하게 보기 위해 몇 가지 핵심적인 테마를 중심으로 각 운동부문이

8) 『참여연대 정기총회자료집』, 1997 참조.

어떤 차이를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 운동부문별 조직특성과 연결망

여성운동 및 환경운동과 달리 사회정의 및 복지운동은 앞서 제시한 세 개의 범주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다른 운동부문과 어떤 차별성을 보이는지를 회원구성, 운동의 전문성, 재정기반, 연대활동, 외부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중앙과 지역운동의 차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회원 구성

신사회운동에 높은 참여를 보이는 사람들은 중산층 중에서도 전문인집단은 독자적인 운동을 펼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기존의 주변부에 있던 사회적 이슈를 중앙으로 자리지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신사회운동과 높은 친화성을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있으며, 당면한 물질적 생존에 연연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물질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사회운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서구적인 특성이 우리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운동실무자의 조사에서도 보면 전문-사무직 종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회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이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부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우선, 전체회원수의 비교를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회원의 규모를 보면, 여성운동과 환경운동부문의 회원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표 1> 평균 회원 수 비교⁹⁾

부문	여성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사회복지운동
초기 회원수	1,544	295	146	51,000
현재 회원수	371,778	4,085	731	56,150

9) 운동단체의 설립초기의 회원수와 현재(1998년 1월 현재) 회원수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표 2〉 남녀회원 비율

(%)	여성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사회복지운동
남자	6.6	62.0	72.1	66.7
여자	93.4	38.0	27.9	33.3

알 수 있다. 인권운동은 비교적 소규모의 운동으로 자리잡고 있어서 회원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사회복지운동 부문은 다양한 운동단체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운동단체-YMCA, 흥사단 등-의 회원수가 큰 규모로 안정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회원을 가진 운동단체들이 규모상의 큰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원의 변화에는 큰 변화가 없게 나타난 것이다.

둘째, 각 운동부문의 남녀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2〉는 각 부문에서 남자의 비중이 여성운동을 제외하고는 월등히 높음을 보여준다.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에 비해 사회정의(인권) 및 복지운동은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인권운동의 경우는 남자회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민가협을 제외하면, 인권운동단체의 핵심을 이루는 종교운동단체나 전문직 종사자 중심의 단체가 주로 남자들로 구성되었기에 여성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회복지관련 운동단체의 경우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교육과 소비생활 부분을 제외한, 보건의료, 교통, 주거부문과 종합운동단체에서는 여전히 남성중심의 운동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도시 부문의 여성 특히, 주부들은 상대적으로 자유시간이 많고 고학력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거나 대부분이 교양강좌나 일회성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들이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과 회원으로서 회비납부 이외의 직접참여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다. 즉, 인적자원은 있는데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측면은 아직은 우리 운동이 서구의 신사회운동과의 거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운동은 일상생활로 나아가고 있기에 주부들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며 이들이 참여가 운동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셋째, 회원들의 직업분포가 운동부문별로 나타난 것을 보면, 신사회운동 특성을 보여주는데 유의미한 근거가 되고 있다. 노동운동 단체들은 주로 노동자와 종교인,

〈표 3〉 회원의 직업 비중

(%)	여성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사회복지운동	구사회운동
전문사무직	33.1	51.6	74.8	55.2	53.2
판매생산직	11.8	13.9	14.5	14.4	21.6
농어민	8.5.	3.4	0	1.9	1.6
주부	42.8	11.3	2.8	14.1	14.6
학생 및 기타	3.8	19.3	2.6	13.7	8.3

교수 등의 전문직 종사자가 주로 참가하는 반면에 여성운동과 환경운동, 그리고 사회정의 및 복지운동 부문에는 참여의 폭이 중산층으로 넓어진다. 전문사무직 종사자가 회원의 핵심을 차지하는 반면에 판매, 생산직 종사자의 비중은 적어진다. 〈표 3〉은 직업을 기준으로 회원분포가 운동부문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인권운동과 복지운동 부문에서 전문-사무직 종사자를 회원으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새로운 이슈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문이고 이들의 참여없이는 정책대안을 준비할 수가 없어서 이들의 참여가 절실하기 때문에이다. 또한 실무자로서 참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새로워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회비납부와 행사참여를 통하여 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전문사무직 종사자이다. 인권, 교통, 교육, 소비생활, 주거 문제는 바로 이러한 전문성을 요구하며, 우리사회의 특수한 형태의 종합운동단체들도 정부를 상대로 해서 사안별로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관계로 전문-사무직들의 참여없이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이들의 참여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한편, 이러한 추세는 구사회운동 영역에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우리사회의 운동이 여전히 전문가 중심의 운동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지 신사회운동 영역으로의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주부들의 참여 — 여성운동은 물론 환경운동, 사회복지운동에서 두드러지며 — 와 학생 — 특히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이나 회원으로서의 참여 — 그리고 사회에 진출하지 못한 예비사회인들의 신사회운동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운동단체들은 회원참여의 증가와 구성원의 변화를 맞이하면서도 그것을 지속적인 참여로 이끌지 못하여 운동에 관심을 가졌던 회원들이 주변에서 멤돌다 실망하고 다시 움추리는 결과를 맞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회원의 참여

에 있는 것이다. 회원을 배제한 채 운동목표와 조직을 바꾸어도, 그것은 몇몇 실무자들의 활동으로 밖에 남을 수 없다. 운동단체들은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올바른 길찾기에 나서야만 한다. 사실 김대중 국민정부의 등장과 IMF 체제가 들어섬에 따라 이미 이러한 요구는 자연스럽게 강제되기도 한다. 사실 올바른 길찾기가 회원의 중심성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은 신·구사회운동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우리는 특히 사회복지운동단체에서 그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 조사에서 특히 종합운동단체의 실무자들은 솔직히 기존의 운동방식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계획하고 또한 실천중에 있음을 밝혔다. 경실련은 비디오파동으로 회원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참여연대는 나름대로 비약적인 회원증가를 거두면서 경실련이 경험하였던 '운동이면에 나타난 일반회원의 소외현상'을 방지하고자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다.¹⁰⁾ 예컨대, 회원들이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 상징통합(회원규범, 회원증, 배지 등)을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이처럼 운동단체들은 결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을 기대하기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대안을 가지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IMF체제가 들어섬에 따라 기존에 생활의 여력을 사회공공선 실현이라는 취지에서 다양한 운동단체에 참여했던 중산층이 현실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운동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회비의 감소, 프로젝트의 감소, 기업의 지원금 중단 등 다양했던 재정원천이 하나둘 없어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한 운동단체들은 회원들이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그만 운동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회개혁과 민주화를 외쳤던 운동단체들도 회원들의 참여부족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다. 예를 들면 인의협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모임도 회원의 관심결여로 회비만 형식적으로 내거나 참여는 줄어드는 활동인력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국민

10) 참여연대는 소수 정예회원으로만 유지되는 운동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회원참여 프로그램을 계획, 실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무직, 청년, 주부 등으로 나누어 대상층별로 회원배가운동을 벌이는 동시에 회원들만의 자치모임을 확대하고 활성화시키고 있다. 작은권리지킴이단, 사회복지청년모임과 같은 사업별로 회원조직을 결성하거나 아파트 공동체운동처럼 지역을 기반으로 한 회원결성 및 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확실히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니지만 회원들 스스로가 참여하여 운동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참여연대 정기총회 자료집, 1997)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새로운 이슈에 운동목표 및 활동내용을 재정비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선결과제를 그대로 둔채 회원의 참여만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운동방식이며 곧 운동유지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2) 사회운동의 전문성

〈통신활용과 국제적 네트워크〉

사회운동은 어쩔 수 없이 정치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사회의 공공선을 실현하는 순수한 운동이고 어디서부터를 당파적 이익실현을 위한 정치정당운동이라고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맞게 된다. 오늘날의 사회운동단체들은 엄청난 양의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예컨대, 운동단체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제시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이는 새로운 의미체계를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새로운 양식과 채널을 제시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시민행동의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한다. 사회운동단체는 이익집단과는 다르기에 이익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불합리한 제도나 법률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이나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 자원과 봉사의 역할도 또한 담당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운동은 이제 국경 안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세계화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외국의 운동단체들과 교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광범위한 연결망을 통해 국내문제와 전지구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동단체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과거와 같은 개인적 친분에 의존한 인력만으로는 지속적인 운동을 유지할 수 없다. 최근의 컴퓨터 통신의 발달로 비롯된 인터넷을 통한 전지구적 연결은 전문성을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부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조사결과 정보민주주의-통신망을 통한 정보교환과 연대활동에 비중을 두고, 통신공간을 통해 일반 시민이 직접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논의-에 대하여 대부분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것은 통신망을 구축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며, 통신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만한 인적자원이 없다는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실무자들의 경우에는 이들의 79.4%가 전자우편과 같은 기본적인 통신활용은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특히 사회복지운동 부문이 가장 높은 활용도(87.8%)를 보인 반면

〈표 4〉 컴퓨터 통신 활용

부문(%)	여성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사회복지운동	구사회운동	계
회원과의 메일교환	23.8	8.8	15.0	30.0	22.5	64.5
협의체, 연합체	18.2	12.5	14.8	30.7	23.9	71.0
국내 타운동단체	17.1	15.7	18.6	28.6	20.0	56.5
외국운동단체	13.3	13.3	30.0	20.0	23.3	24.2
개인적인 일	15.5	16.7	17.9	28.6	21.4	67.7
기타	41.7	16.7	16.7	25.0	0	9.7

에 여성운동 부문이 가장 낮은 정도(70.0%)를 보였다. 그리고 활용내역을 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대부분의 운동단체들은 상급단체인 연합체나 협의체와 가장 빈번하게 통신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회원과의 메일교환과 같은 개인적인 일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성격이 다른 운동단체와의 통신공간을 활용한 접촉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권운동부문 단체들은 국제적인 이슈를 놓고 취하는 국제적인 연대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까지 인터넷에 자신의 조직과 활동을 알림으로서 회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홈페이지 개설 노력은 몇몇 단체에 머물었다. 사실 어떤 단체들의 홈페이지들은 만들어지고서도 지속적인 자료제공이 안되어 유명무실해지는 경우도 많다. 누가 먼저 만드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고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¹¹⁾

또한 외국과의 연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에도 능통해야 하고 국제문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등 국제적인 마인드가 전제되어야지 무조건적인 전지구적 영역확대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세계가 열려졌다고 해서 운동이 바로 전지구화되는 것이 아니며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 운동 현실을 보면 이런 전문성을 갖춘 운동단체는 솔직히 몇 개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 그리고 과거 국제적인 활동도 소수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들은 외국재단으로부

11) 한 실무자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다를 줄 아는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 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통신공간을 통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전에 인적 네트워크를 틈실하게 구축하고 이를 통한 통신네트워크 구축을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터 지원을 요청하는 형식의 운동에 역점을 두었다. 최근에는 북한동포돕기운동에서 국제적인 연대활동이 몇몇 단체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이것 역시 소수 실무자의 국제적인 친분관계에 의존한 연대활동이라는 한계가 있다.

3) 재정기반

운동단체의 재정문제는 회원의 참여와 직결된다. 각 운동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서 회원들의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가가 회비납부의 중요한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회원의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회비가 납부되는 계좌이체나 지로용지를 통한 회비납부는 사실 대안이 될 수 없다. 활동의 기회와 참여방법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최근에 대부분의 운동단체들이 겪고 있는 회비감소의 문제는 회원들은 더 이상 자료집만 받고 회비만 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 실무자중심의 상충수준의 활동방식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부분이 전체 재정의 30% 이하를 회비에 의존하고 있어서 다른 재정기반을 찾을 수밖에 없어서 그 대안으로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운동부문별로 보면 여성운동이 정부의 지원이 늘고 있으며, 환경운동 부문은 상대적으로 기업의 지원금이 늘고 있다. 이는 환경운동단체들이 활동을 주로 기업이나 언론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들로부터 협찬형식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의미한다. 여성운동이 보건복지부, 공보처, 정부 제2장관실, 문화체육부 등과의 연대활동을 벌여 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

〈표 5〉 재정의존도 비

부문(%)	여성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사회복지운동	구사회운동	평균
회비비	13.6	24.5	26.7	31.6	43.7	28.9
정부지원비	16.9	7.2	15.8	10.6	1.7	10.0
개인후원비	6.9	14.8	22.2	15.9	13.9	14.9
기업후원금비	3.1	14.2	3.9	6.0	.8	5.6
지자체후원금비	8.4	11.8	0	9.5	2.1	6.6
수익사업비	16.5	11.8	17.1	14.9	15.1	15.0
자산수익비	13.3	4.4	1.3	2.1	3.2	4.4
기타비	21.2	11.1	4.7	9.4	13.0	11.5

다. 환경운동의 경우에는 지역에 기반을 둔 환경운동단체가 많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 폭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정기반의 특징은 바로 외부환경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정부, 기업, 언론, 지자체, 정당, 외국기관 등으로 외부환경을 나누었을 때, 연결망의 정도는 바로 재정동원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인권운동이 외국기관과의 연결망의 폭이 넓다는 것은 바로 외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한편, 종합운동단체들이 광범위한 연결망을 보이는데, 특히 언론과의 연대활동은 자신의 활동을 일반 시민에 알리는 홍보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실련, 참여연대는 한국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과 기획연구를 하면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개발 연대활동을 벌여 왔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언론은 운동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실제로 종합운동단체일수록 재정기반이 넓어지고 있는 반면에 단일운동단체의 경우에는 회원감소와 개인후원금의 감소로 재정기반이 점차 취약해지는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듯, 종합화를 지향하는 몇몇 운동단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재정기반의 취약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외부와의 연대활동이 어떻게 유지되는가가 재정기반의 폭을 넓히고 안정적인 운동을 유지할 수 있는 틀이 될 것이다. 아마도 현재로서는 환경운동과 여성운동보다는 사회정의 및 복지운동부문이 연대활동의 폭을 더욱 넓혀야 할 처지다.

4) 운동단체간의 연결망

운동단체간의 연결망을 부문별로 보았을 때 여성운동과 환경운동의 경우는 몇몇 핵심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연결망을 형성하는 반면에, 사회정의 및 복지운동부문은 다양한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연결망을 발견하기가 힘들었다. 앞서 이 부문을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그 운동발전을 살펴보았듯이 연결망에 대한 분석도 이 구분을 따라, 인권운동부문의 연결망, 복지운동의 연결망, 그리고 종합운동단체간의 연결망을 각각 살펴보았다. 특히 복지운동부문은 몇 가지 부문으로 더 나누어 이슈별로 각각의 연결망의 양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중요한 이슈를 중심으로는 어떤 형태의 연결망을 이루는지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결망의 모양은

구사회운동과 다양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여성운동과 환경운동과의 차별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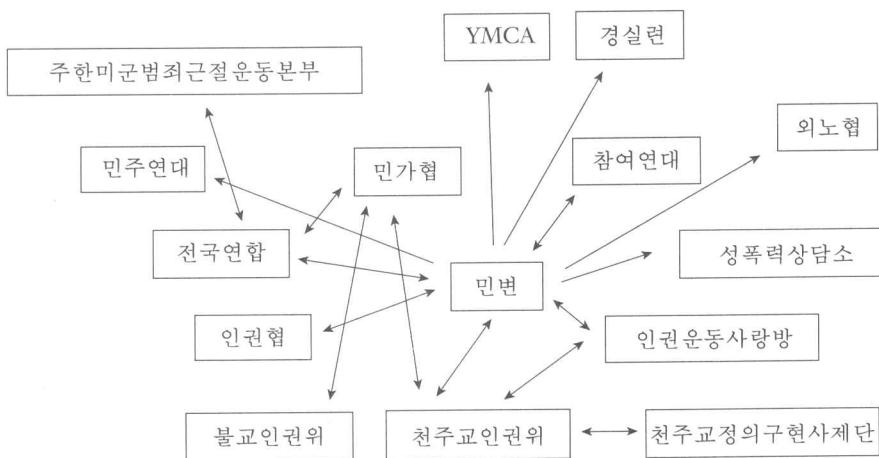
한편, 연결망 분석에서는 핵심운동단체(star)와 운동부문을 연결하는 매개운동단체(broker)를 밝혀보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대활동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운동부문간 친화성과 근접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운동단체들이 연결망 구축에서 신사회운동적인 특성을 어느 정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인권운동 단체의 연결망〉

인권운동부문의 연결망 분석에서는 민변이 핵심운동단체로 나타났다.(아래 <그림 1> 참조) 민변의 활동을 보면, 과거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독자적인 활동에 주력하였지만 최근에는 이슈가 다양해지면서 인해 연대활동의 폭도 넓혔다. 지금까지 민변은 기본적으로 연대활동에 있어서 수혜자라기 보다는 제공자의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조직 차원의 연대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속 회원들이 개인적인 관심으로 연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는 민변 소속변호사가 다른 단체에 중첩적으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이른바 ‘공대위’가 형성되어 기존에 연대활동을 해왔던 단체가 주관을 한다면, 민변은 의례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참여연대와 이러한 의례적인 연대활동을 빈번하게 벌이고 있다. 이는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이 참여연대에 중심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동시에 이러한 활동에 법률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민변은 경실련과도 연대활동을 사안별로 추진하고 있다.

민변과 상시적인 연대활동을 벌이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 하나가 한국인권운동 협의회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연대이다. 후자는 1997년의 노동법 파동이후 운동의 지속적인 유지를 목표로 만든 상충적인 연대기구이다. 여기에는 주로 전국연합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적인 운동단체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권 협은 인권운동단체들의 상시적인 연대활동의 필요성을 느낀 몇몇 단체들이 1994년에 결성한 협의체이다.¹²⁾ 매달 집행위원회를 열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인권협은 소속단체들이 그다지 강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12) 인권협의 소속단체에는 민변,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 기독교인권센타, 불교인권위,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유가협, 민주법연, 전국연합인권위 등의 10개가 현재 참여하고 있다.



〈그림 1〉 인권운동부문 연결망 — 민변을 중심으로

협의체 속성상 소속단체 중에 한 단체가 간사단체가 되어 협의체의 일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회비 역시 각 사안별로 수집하여 활동에 사용하거나 사안이나 단체의 사정에 따라 회비를 걷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의 연결망에 나타나있듯이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활동은 민변, 민가협, 천주교인권위가 긴밀한 연대활동을 하면서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한편, 인권협 소속단체이지만 종교운동의 성격이 강한 종교인권운동단체들의 활동도 인권운동의 다른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불교인권위원회, 기독교인권센터가 그것이다. 한편 인권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이 단체는 일반회원조직이 없으나 상근활동가 조직으로서 「인권하루소식」이라는 팩스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인권현안과 문제를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많은 연대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도 인권협 소속단체와의 연대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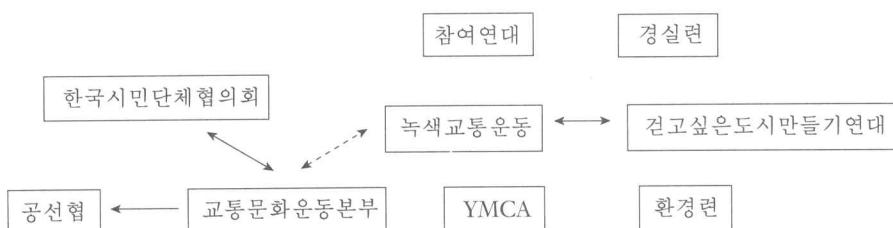
〈사회복지운동 단체의 연결망〉

우선,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운동이슈와 연결되어 있는 교통부문의 운동단체들의 특징적인 연결망을 들 수 있다.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교통문화운동본부, 녹색교통운동, 도시연대의 연결망 특징은 〈그림 2〉와 같다. YMCA, 경실련,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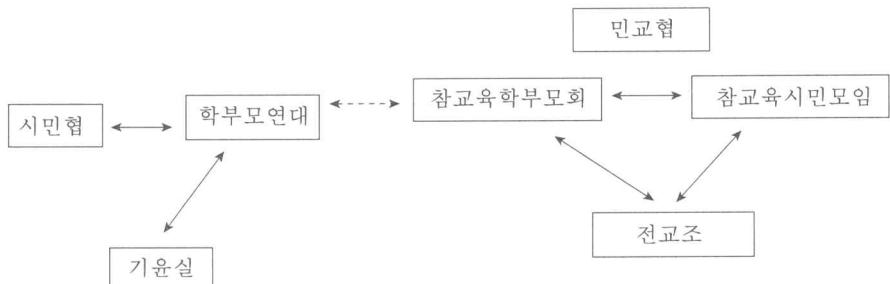
운동연합, 참여연대 등과 같은 종합운동단체들이 녹색교통운동과 도시연대가 동시에 연대활동을 한 상대로서 연결망에 나타났다. 인권운동부문의 연결망에서도 몇몇 단체는 연결망에서 빠져있는 것처럼 교통운동단체들도 성격이 다양하고 표방하는 가치도 다르기에 교통문제 해결을 표방하는 단체들 모두가 연대하지는 않는 것이 연결망 지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녹색교통운동은 교통운동단체 중에서도 도시연대와 가장 긴밀히 연대하고 있으면서, 사안에 따라서 YMCA,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종합운동단체와의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노동운동단체와의 연대활동은 어떠한가를 조사한 결과는 교통문화운동본부는 노동조합과 별다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반면에, 녹색교통운동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와 연대하고 있다. 이 연대의 주요 관심사는 택시노동자의 완전월급제에 대한 활동으로서 택시노조, 자동차노련, 지하철노조 등과 주로 연대하였다. 또한 도시연대는 노조와 연대활동을 하지만, 택시노조를 제외한 지하철, 철도노조와 연대하고 있다. 이들의 입장은 지하철과 철도의 문제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안이기에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전문 사회운동단체나 연구기관과의 연대가 필연적이다는 입장이다.

둘째, 교육부문의 운동단체들간의 특징적인 연결망을 들 수 있다. 교육부문의 운동단체들의 발전경험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부모연대와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소속의 교육관련운동단체, 그리고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옛 해직교사후원회로부터 출발한 참교육시민모임이 운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학부모연대는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개혁적인 운동단체와는 사안에 따라 연대활동을 하는 약한 연결망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한국시민협, 기윤실과는 강한연결망을 이루고 있다. 이는 자녀 교육과 관련된 일이면서 교육윤리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문화의식과 가치관을 심어준다는 취지에서 기윤실의 운동목표



〈그림 2〉 교통부문의 연결망



〈그림 3〉 교육부문의 연결망

와 일치하기 때문에 강한 연대가 가능해진 것이다.

한편, 참교육시민모임은 교육운동을 전개할 때,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와의 연대를 기본으로 활동한다. 이 단체는 세 단체간의 연결망을 유지하면서 그 외의 단체와는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식할 때 연대활동을 벌이지만 이것은 약한 연결망의 수준의 연대활동이다. 예컨대, 참교육시민모임은 학부모연대와는 달리 시민단체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학부모연대와는 사안에 따라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부문의 연결망은 다른 부문과 달리 여성운동부문과의 강한 연대활동을 보이는 데 이것은 학부모들(특히 주부)이 중심이 되어 교육운동을 전개하기 때문이다. 여성단체연합과 여성민우회는 여연의 참관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와 참교육시민과의 강한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는 반면에, 학부모연대는 기윤실과 정사협과 같은 의식개혁운동단체와 친화적인 관계를 보였다. 특이할 만한 것은 이 부문에 있어서 종합운동단체들과의 연결망이 아주 희박하다는 것이다.

셋째, 보건의료부문의 연결망을 들 수 있다. 보건의료부문의 운동단체로는 건약과 건치, 그리고 인의협이 조사되었다. 이부문의 운동단체들은 다양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데, 의료부문 안에서의 연결망은 보건의료대표자협의회라는 협의체(8개 단체의 대표모임)를 중심으로 상시적인 연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건치, 건약, 청년한의사회, 기독교청년의료인, 노동과건강연구회, 진보와연대를 위한보건의료인연대, 평등사회를 위한민중의료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보건의료단체공동수련회를 갖거나,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및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와 공동세미나를 가졌으며, 북한수재민을 돋기위한 보건의료부문의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사회복지부문에서 노동운동과의 가장 강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보건의료부문이다. 예를

들면 건약은 보건의료부문이외의 다양한 사회운동단체와의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민주사회개혁시민단체에 참가하거나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연대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의료보험통합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의보연대를 통해 전국연합과의 연대활동 하였다. 건약과 건치의 설립초기의 운동목표를 보면 충분히 노동운동단체 및 재야운동과의 강한연결망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건약의 경우, 노동조합과의 연대가 지역의 지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울산분회의 경우에는 현대자동차노조와 연대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건강상식을 알려주는 활동을 했다. 이렇듯 건약의 지부의 회원들은 소속지역의 노조와 연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중앙단위에서는 노조와의 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치의 경우에는 타 보건의료부분과의 공동실천을 위한 범의료인 연대기구 창출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에 소속된 단체이다. 그 외에도 보건의료단체간사회의와 실천과제별로 협의구조를 이끌어가고 있다. 또한 설립된 지 10년을 맞이하는 인의협은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의 모임인 민변의 왕성한 활동에 비하면 초기의 활동성과에 비해 최근 들어서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조직을 정비하고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연대활동에는 그만큼 운동역량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의보통합연대회의와 북한동포돕기민간단체전국회의에 참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상대적으로 건약의 경우에는 보건의료단체부문내의 강한 연결망을 비롯하여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국연합, 경실련, 여연, 민교협, 지식인연대, 환경련, 민예총 등 대부분의 종합운동단체와의 사안에 따른 연결망을 광범위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가장 왕성한 연대활동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거와 소비생활과 관련된 운동단체들의 연결망을 들 수 있다.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은 자체의 운동역량이 미진하며, 또한 동일한 운동목표를 가지고 있는 운동단체들이 적은 이유로 종합운동단체와의 강한 연결망을 유지하고 있다. 예컨대, 주거연합은 사안별로 종교계의 빙민선교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와 한국도시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제공받는 등의 수혜적 관계에 있다. 그리고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과 같이 종합적인 운동을 추구하는 운동단체들과는 사안별로 강한 연결망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생활협동조합협의회는 소비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운동단체와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나 지역의 YMCA와 사업별 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범위에 있어

서 농협에서부터 귀농운동본부까지 광범위한 연결망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생협의 활동 특성상 다양한 연결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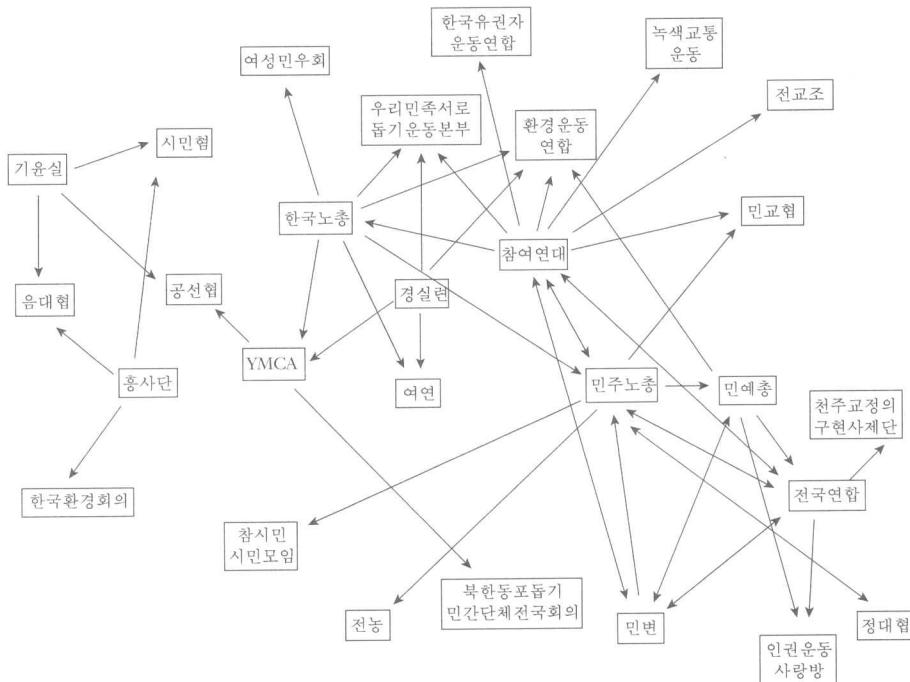
〈종합운동단체간의 연결망〉

앞서 종합운동단체로 분류한 YMCA, 경실련, 기윤실, 참여연대, 흥사단 등은 어떤 하나의 운동을 추구하기보다는 다양한 이슈를 동시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타 단체와 연대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또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제를 운동목표로 삼기 때문에 이슈가 변하면 그때그때 연대의 대상을 변화시키거나 확대하는 역동적인 양태를 보인다.

우선 중앙수준의 종합운동단체의 연결망을 보기 위해 운동단체간의 정보는 물론, 인적 물적 교환까지 하는 연결망을 따로 구성해 보았다. <그림 4>에서처럼 종합운동단체들은 다양한 운동단체와 연대활동하고 추진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중에도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두 단체를 좌측에서는 노동운동단체인 한국노총이 우측에서는 민주노총과 전국연합이 둘러싸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중앙의 종합운동단체들이 구사회운동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사안별로 강한 연대활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권운동부문에서 민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연결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북한동포돕기운동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연결망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몇몇 개인의 친분이나 과거 그 단체의 핵심 인사가 개인적인 연줄망에 의존하여 조직차원으로 연대활동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중앙수준에서 종합운동단체들은 환경운동과의 연대활동이 두드러졌다. 이는 종합운동단체들이 최근 들어 운동역량을 환경운동으로 확대하거나 이동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해주는 것이다. 경실련의 환경개발센터 신설, YMCA의 환경사업에의 집중 등은 자연스럽게 이들이 환경운동연합과의 강한 연결망을 형성하게끔 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경실련보다 구사회운동 부문과 친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연대의 폭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기윤실은 주로 윤리의식운동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활동의 폭이 제한되어 나타났다. 예컨대, 음란물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한 윤리의식운동은 교육과 의식개혁운동을 하는 다양한 운동단체간의 연대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림 4〉 중앙수준의 종합운동단체의 연결망 (Krackplot 재구성)¹³⁾

전체적으로 보건대, 중앙에서 활동하는 종합운동단체들은 사안이 빈번하게 바뀌고 정부를 대상으로 비판과 견제활동을 하기에 공통의 관심사가 나올 때는 강한 연대활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각자 특유한 사업에 있어서는 차별성을 보이는 이중적인 연대활동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단체와 기본적으로 거리를 두는 단체는 노동운동단체와의 연대의 모습을 거의 찾을 수 없는 반면에, 현실적으로 그런 경계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운동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추구하고 있기에 연대의 폭이 광범위해졌다. 참여연대가 중심성(centrality)이 가장 높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므로 환경관련 단체의 연대활동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13) 이 연결망에 포함된 운동단체는 총 29개이며 연결망에 제외된 고립자(isolator)를 제외한 결과만을 대상으로 Krackplo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그림은 Krackplot의 결과를 한글그림 그리기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로 지역경실련과 지역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지역의 시민운동연합은 지역의 공통적인 이슈가 출현할 때마다 강한 연대활동을 보이고 있다. 부산, 춘천, 수원, 울산, 대구, 대전 등의 지역조직들은 지역의 거의 모든 이슈를 다루는 종합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사안별로 일종의 ‘힘싣기’ 차원에서 강한 연대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발전의제 21-21세기를 맞아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한 실천아젠다-개발이나, 지역환경, 그리고 지역자치 등의 문제에서는 운동목표가 조금씩 다른 운동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운동목표와 관련 없이 왕성한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5) 외부환경과의 관계

〈외부환경과의 연대활동 일반특성〉

사회운동단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변화는 몇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위주의정치 하에 정부로부터 법적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던 단체들도 최근 법적 단체로 등록하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¹⁴⁾ 또한 그 동안 단체설립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비판받던 ‘사회단체에등록에 관한 법률’도 ‘등록’이라는 용어 대신에 ‘신고’로 변경하는 등 상당한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¹⁵⁾ 정부 역시 정책결정과정에서 그동안 재야단체, 또는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로서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던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운동연합과 같은 단체의 대표자들을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적극 참여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2기 노사정위원회’가 꾸려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동시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현상과

14)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은 1988년 설립 이후 재야단체로서 활동하다가 정부가 규정하는 이른바 임의단체로의 활동을 그만두고 1993년 문민정부 출범이후, 그해 8월에 사단법인으로 전환, 문화체육부에 등록하게 되었다. 1994년부터는 행사내용에 따라 문예진흥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정부부처와 다양한 연대사업을 벌이고 있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부, 문예진흥원, 문화정책개발원 등과 각종 문화정책에 대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통일원과는 남북문화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협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15)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이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36호로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으며, 신고관청도 중앙관서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

더불어 정부가 소위 관변단체라는 친정부적 단체에 대한 정책변화를 보이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같은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은 1992년도에 총 459억원에 달했으며, 이들이 점유하고 있던 관청사무실도 무려 6백여 개에 달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砍감내지 폐지하기로 결정하여 이들의 활동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사회단체육성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정부의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문민정부 시기에는 시민운동단체를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일정한(?)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원하는 정부주도의 육성정책을 실시하기도 했다.¹⁶⁾

한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사회운동단체들, 즉 과거 지역YMCA나 이익집단(JC, 로탈리클럽, 라이온스클럽, 각종 이익단체) 등이 지역현안에 대해 협조하거나 이권에 관련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전형적인 이익집단행동을 해왔다. 그러나 지역의 문제는 지역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역자치의 취지하에 지역의 지식인과 운동가를 중심으로 운동단체가 꾸려졌다. 지역의 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은 설립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 구성원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 자체와의 관계는 지방으로 갈수록 보다 근접되어 있다.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교통캠페인, 자원봉사활동, 청소년문화 교실,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같은 비교적 비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약이행도 조사, 지방발전의제 21사업, 환경파괴적 개발과 같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벌여서 지자체와 갈등적인 관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역으로 갈수록 운동은 지자체와 다양한 연계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16) 공보처(현재는 폐지되어 국무총리실 산하 공보실과 문화관광부로 그 기능이 분산, 수용됨)는 1994년 4월 민주적 공동체의식 함양사업지원을 공개 모집하여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13개 단체에게 총 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후 이 사업은 다른 단체에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부 제1장관실의 지원하에 운동단체 실무자들의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17) 지역운동단체들의 외부환경과의 연대활동을 조사한 결과, 지역의 정서가 양자의 관계를 갈등적 또는 친화적인 관계로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았다. 환경운동단체들이 지자체와 다양한 연대를 보이는 반면에, 인권운동과 복지관련운동단체들은 이러한 연계가 거의 없다. 종합운동단체의 경우도 지역조직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지역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대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연대활동을 형성하는 대부분의 부서는 환경과, 사회과, 도시정비과, 청소년문화과 등에 집중되어 있다. 사실 아직까지는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는데 지역의 운동단체가 주

외부환경으로서 기업에 대한 사회운동단체들의 거리는 이 가장 멀게 나타났다. 기업은 대부분의 경우가 일회적 행사에 협찬 또는 후원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삼성과 선경이 그래도 가장 많이 후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도 복지관련운동단체(장애인 운동단체)에 한정되어 있었다. 특히, 장애인 후원사업이나 지역운동단체-경실련, 환경운동연합, YMCA 등의 지역조직-의 행사에 후원하고 있는 수준이다.

한편 외부환경으로서의 언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운동단체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컨대, 인권운동단체들은 정부, 지자체, 기업과는 거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언론과는 인권문제를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다양한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그리고 민가협이다. 이들은 신문과 방송매체를 통하여 양심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노력하였고, 그 결실은 최근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양심수 석방에서 거두기도 했다.

정당과 외국단체와의 연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사례가 없었다. 정당은 국민회의와 국민승리21이 운동단체와 비교적 많은 연대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전자가 주로 인권운동단체와의 연대라면 후자는 노동운동단체와의 연대였다. 외국기관과의 연대의 폭은 상당히 넓었지만, 노동운동은 주로 국제노동기구(ILO), 인권운동은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한 각 국의 인권단체와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혜적인 관계가 지배적이다. 앞으로 국제적인 연대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단체들이 운동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연대를 위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주요 운동단체의 외부환경과의 연대사례〉

운동단체들간의 연대활동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 각 운동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외부환경과의 관계도 운동단체의 기본적인 연대활동 방향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선 인권운동부문을 살펴보면, 인권운동단체들끼리 내부적으로 강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정부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권운동단체 대부분은 정부기관, 지자체, 기업과는 거의 연결망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

도적이기보다는 지자체에 협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며, 그 대신 인권문제를 일반 시민에 알리기 위해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천주교 인권위원회이다.¹⁸⁾ 또한 인권문제는 우리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인 이슈로 관심을 모으기에 위해서도 적극적인 국제적인 연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인권운동부문의 외국기관의 연계가 가장 왕성하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인권운동사랑방과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이다.¹⁹⁾

다음으로 사회복지부문의 외부환경과의 관계를 보면, 대표적인 단체로 교통문화운동본부, 학부모연대,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을 들 수 있다. 교통문화운동본부는 앞서 비슷한 운동단체와의 연대활동에서 녹색교통운동과 도시연대와는 차별성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 차이는 이 단체가 주로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언론과의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추진하는데 있다.²⁰⁾ 교육부문에 있어서 학부모연대는 정부와의 가장 적극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단체이다. 전교조, 참교육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가 노동운동단체와의 긴밀한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학부모연대

- 18)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종교계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 회원에 의한 실천적인 활동보다는 인권문제를 언론에 알리고, 다른 인권운동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예컨대, 한겨레 21과는 양심수시리즈를 제작하고 있으며, MBC의 안기부개혁시리즈 제작에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즉, 인권문제에 있어서 언론에 자료를 제공하며 이슈를 던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19) 인권운동사랑방은 인터넷을 통하여 외국에 한국의 인권현실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 운동실무자 중심의 조직이다. 특히 한국의 인권현실을 알리기 위한 인권영화제를 주최하는 과정에서 이 단체의 대표가 구속된 일도 있었다. 현재 인권운동사랑방은 통신공간을 활용하여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연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노협은 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침해를 막고 제도적인 보호를 목표로 하는 여러 운동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아시아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에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의 연대활동을 벌여왔다. 예컨대, Asian Migrant Center, Asian Monetary Research Center, Asian Center for Women's Human Rights Center,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sian Regal Resource Center 등과의 연대활동을 벌였다.
- 20) 교통문화운동본부는 교통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청회 및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도 교통관리문제에 있어서도 연대하고 있다. 한편, 교통문화운동본부는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주요 일간지와 방송3사 모두에게 취재 및 자료협조를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일반 시민에게 알리는데 아주 적극적이다. 최근들어 조직이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도 증가하고 있는 편이다.

는 노동운동단체와는 거의 연대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학부모연대는 정부나 지자체가 시민운동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지역의 교육청과 공통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것은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장애복지 부문에 있어서 장애인단체는 정부는 물론 기업으로부터도 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기업이 이미지 고양을 위해서 장애인단체에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²¹⁾

사회정의 및 복지운동부문의 하나인 종합운동단체의 경우는 여성운동이 문체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달리 공보처의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는 경실련, 참여연대, YMCA, 기윤실 등이 참여하였고, 지역조직들은 중앙부처 보다는 지역의 정부관련기관과 연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컨대, 지역경실련이 한국도로공사, 환경보사국,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도 가장 활발하게 연대하는 운동단체 역시 지역경실련이다. 특이할 만한 것은 종합운동단체들이 언론과의 연대활동에서 가장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정책대안을 알리고 일반 시민에게 활동을 거의 매일같이 알릴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언론이기 때문에 언론과의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 중에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참여연대의 경우 언론을 통한 홍보는 물론 언론과의 공동사업을 벌이기도 했다.²²⁾

마지막으로 1997년에 운동단체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의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북한동포돕기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범국민적인 운동

2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각각 형성하고 있는 외부환경과의 연대는 매우 광범위하다. 중앙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서울시, LG 등으로부터 행사지원과 장애인 복지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언론도 장애인 행사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빈번하게 알리고 있다. 지역의 경우에는 삼성이 장애인 날의 행사후원과 부산일보와 국제신문과 연대하여 장애인 결혼상담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바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보여주며, 다른 부문과 달리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외부환경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추진하게 된다.

22) 한국일보와 '민선지방자치 2주년특별기획' 시리즈를 통하여 각 자치단체장의 사업을 부문별로 평가하여 높은 호응을 받았다. 경향신문과는 '세기말 한국의 정책과제'에 관한 세미나를 기획하였고, 한겨레21과는 '작은권리찾기운동'을 매주 시리즈로 내고 있다. 국민정부 들어서자 참여연대는 한겨레신문이 기획하고 있는 '개혁과제 세미나' 시리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심하게 말하면 참여연대의 성장은 언론의 지원과 연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기에 거의 모든 단체나 기관이 참여하였다. 그 중에도 가장 주목받을 만한 단체는 바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이다. 모금을 통해 운동단체를 꾸려 가는 운동단체로서 적극적인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단체의 핵심실무자의 개인적인 친분을 통한 네트워크도 일정정도 차지하지만 이 단체만큼 짧은 기간동안 다양한 연대를 실시한 단체는 없을 것이다.²³⁾ 그러나 운동이 과연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운동이 지나치게 세물이식 운동과 행사위주의 운동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신사회운동이 정부에 도전적인 특성을 가졌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 운동부문은 아직은 정부를 비롯한 외부환경과의 수혜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노동운동단체와 재야운동 단체들은 정부와의 도전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진보적인 언론과의 부분적 연대나 외국기관과의 연대를 맺고 있어 외부환경과는 비교적 폐쇄적인 망을 이루고 있다. 반면에, 인권운동이 정부에 도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언론과의 연대를 통해 주변부적 이슈를 중심에 위치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속에서 서구적인 신사회운동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5. 전망과 과제: 운동의 발전과 퇴보의 기로

1990년대 들어 사회운동단체들은 전성기를 맞이할 정도로 국가나 시민사회로부터 주목과 관심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운동단체들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그 수에서 그 절정기를 보였으며, 그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하강곡선을 나타냈다. 그러나 1997년 말에 터진 IMF 사태는 국가를 총체적인 위기상태로 몰아 놓고야 말았다. 운동단체들도 역시 IMF 한파로 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그런데 문제의 중요성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의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존폐위기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IMF 사태는 단지 운동단체로 하여금 경

23) 이 단체는 구소련동포강제이주 60년 기념사업을 벌여 동포들에 대한 사랑을 환기 시켰다. 국제교류재단과의 연대를 통해서 국제적인 연결망을 형성하였다. 한편 각 언론사를 통해 북한동포돕기운동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북한동포돕기, 옷보내기, 옥수수보내기 등의 다양한 이슈를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 북한동포를 위한 1일 금식행사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는 모금사업을 하기도 했다.

제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운동의 방향을 잊고 어리둥절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하다. 지금까지 운동단체들은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위기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으며 조직내부에서도 합리적인 정책대안에 관하여 혼란스런 모습을 보여 왔다. 이렇듯 운동단체들은 IMF 체제의 급작스러운 대두에 따른 경제적인 압박과 운동영역의 전지구적 차원으로의 확대에 따르는 정책 형성과 구현 등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주체적, 능동적, 합리적으로 극복하는가가 바로 우리 운동단체들의 미래의 발전과 퇴보의 갈림길이 되고 있다. 앞서 사회정의 및 복지운동부문의 단체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영역을 개척해 가고 있으나, 몇 가지 경계해야 할 장애물도 현존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장애물을 연대활동의 문제, 운동의 급진화 및 제도화의 문제, 그리고 운동의 중첩성 문제 등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운동전망과 과제를 대신할까 한다.

첫째로, 연대활동과 관련된 사회정의 및 복지운동단체들의 장애물을 지적해 보자. 교통, 교육, 보건, 주거, 소비 등과 같은 복지부문은 나름대로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소규모 조직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종합운동단체들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실 운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운동조직들과의 사안별 연대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제는 운동이 거대화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회원들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부족한 부문은 연대활동으로 채우면 된다. 따라서 연대활동은 앞으로 우리 운동조직들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략이며 전술이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이슈는 전통적인 계급갈등에서 비롯된 것부터 새로운 갈등요인(환경, 성불평등, 실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운동조직들도 전통적 의미의 구사회운동부문과 신사회운동부문에 두루 위치하고 있다. 실제로 연결망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는 운동부문의 경계를 넘어서는 강한 연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IMF 사태는 이러한 부문간의 연대활동을 더욱 더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는 회원의 감소로 재정은 점차 어려워지고 사업도 축소될 것이다. 반면에, 운동단체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이슈는 결코 줄지 않고 심지어 늘어날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운동단체들이 자신만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참여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책임감 있게 연대활동에 참가해야만 한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은 실무자는 물론 회원들을 지치게 만들 뿐이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앞서 살펴본 연대활동 사례에서 인권운동단체들의 단단한 연결망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운동의 급진화와 제도화의 문제가 있다. IMF 사태로 몇몇 운동단체들은 정부나 지자체에 지원을 바라게 된 이상, 이들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점차 제도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이슈는 결코 정부의 정책에 순종할 수만 없는 민주주의와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 즉, 환경, 성불평등, 인권, 기타 복지문제 등은 때로는 정부를 호되게 비판할 수 있는 진보적인 태도를 필요로 한다. 운동단체가 단순히 재정문제를 핑계로 안정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선 실현을 위해 필요한 비판의 목소리를 접어둔다면 그 운동단체는 일반시민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될 것이다. 물론 무조건 급진화의 길을 걸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다. 정책과 사안에 따라서는 정부와의 대화가 더욱 더 필요한 경우도 있다. 우리사회의 운동단체들은 점차 제도화와 급진화의 갈림길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복합 위험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당분간은 제도화의 길을 걷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앞서 녹색교통운동, 도시연대, 주거연합, 전약, 건치, 인의 협, 민변, 참교육시민모임 등의 활동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운동단체들은 활동의 중첩성 문제를 보이고 있다. 운동단체들의 운동목표를 조사하면 하나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운동단체들은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환경이슈가 제기되면 모든 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뛰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관심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운동역량의 낭비이다.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출발했으면, 지속적인 정책대안연구와 사업활동을 통해 일반시민에 대한 인지도와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합운동단체들은 이른바 백화점식 운동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이 중첩되고 있다. 사실 사안에 따라서는 운동단체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단체들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모든 운동단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운동에 있어서 역할분담이 필요한데, 이런 역할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사안에 따라서 강한 연결망을 토대로 연대활동을 벌인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운동단체들이 운동패권주의에 빠져서 운동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운동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을 범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회원을

운동중심에서 멀게 만들고 몇몇 실무자들의 운동이 되는 문제를 낳게 된다. 이제 운동단체들은 운동영역을 확장하여 활동이 중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일반 회원들의 요구를 꾸준히 반영한다면 이러한 실무자 중심의 운동영역 확장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 이제 회원이 다시금 운동중심에 서야 한다. 이것이 바로 IMF 시대를 맞이한 운동단체들의 최우선 과제이다.

참고문헌

- 강문규(1996), 『시민참여의 시대』, 한울
- 경실련(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경실련 출범 기념자료집』
- 공보처(1996), “공동체시민의식과 시민단체의 역할,” 『'96 공동체 시민운동세미나』
- 공석기(1997), “1990년대 한국 사회운동 조직에 대한 경험적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도완(1996), 『한국 환경운동의 사회학: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문학과 지성사
- 김성국(1996),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한국 사회과학연구협의회
- 김영래(1997), 『이익집단 정치와 이익갈등』, 한울
- 김용학·송호근(1998), 『한국노동조합의 연결망』,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기독교윤리실천운동(1997), 『10주년 기념 기윤실 활동자료집』
- 김형준(1996), “정보화와 사회운동,” 『지식인연대』, 지식인연대
- 박형신·한상필(역)(1995), 『새로운 사회운동의 도전』, 한울
- 시민의신문(1997), 『한국민간단체총람』
- 이신행(1997), 『한국의 사회운동과 정치변동』, 민음사
- 이재열(1994), “지방시민사회와 중간조직의 역할,”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민음사
- 이효선(1997), 『현대한국의 시민운동』, 집문당
- 이효재(1996), 『한국의 여성운동 — 어제와 오늘』, 정우사
- 임현진(1995), “전환기 한국사회의 과제에 따른 한국정치의 역할,” 『정치개혁 아젠다 10』, 백산서당
- 전국연합(1997), 『전국연합통신』, 118-125호
- 조대엽(1995), “한국의 사회운동과 조직유형의 변화에 관한 연구: 1987-94”,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조돈문 편저(1996a),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 I — 이론적 이해와 연대의 경험』,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1996b),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 II — 연대경험의 분석과 연대발전의 방향』,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조희연(1996), “민중운동, 시민사회, 시민운동,” 유팔무, 김호기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 참여연대(1995, 1996, 1997), 『정기총회 자료집』

- 크리스챤아카데미 편(1996a), 『지방화와 지구화 그리고 시민운동』, 한울
_____ (1996b), 『한국시민사회의 이해』, 한울
- 한국YMCA전국연맹(1997), 『YMCA 활동자료집』 I, II.
- 환경운동연합(1997), 『1996 환경운동』
- Beck, Ulrich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Sage.
- Borgatti, Everett and Freeman (1992), *UCINET IV Version 1.0 Reference Manual*, Columbia: Analytic Technologies.
- Borgatti, Everett and Freeman (1992), *UCINET IV Network Analysis Software User's Guide*.
- Calhoun, Craig (1994), *Social Theor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Blackwell Cambridge.
- Carden, M. Lockwood (1989), "The Institutionalization Social Movements in Voluntary Organization," *Research in Social Movements, Conflict and Change*, Vol. 11.
- Chung, Chulhee (1995), "Structure, Culture, and Mobilization: The Origins of June Uprising in South Korea," Ph. D Dissertation, The Univ. of New York at Buffalo.
- Gamson, William A. & David S. Meyer (1996), "Framing Political Opportunity," Doug McAdam, John D. McCarthy & Mayer N. Zald,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Cambridge Univ. Press.
- Gamson, William A. (1975), *The Strategy of Social Protest*, Wadsworth Publishing Co.
- Habermas, Jürgen (1996), *Between Facts and Norms — Contribution to a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 translated by William Rehg,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Klandermans, Bert (1992), "The Social Construction of Protest and Multiorganizational Fiel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Aldon D. Morris & Carol McCurg Mueller eds, Yale Univ. Press: New Haven and London.
- Kriesi, Hanspeter (1996),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New Social Movements in a Political Context," Doug McAdam, John D. McCarthy & Mayer N. Zald,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Cambridge Univ. Press.
- Laumann, Edward O. & David Knoke (1987), *The Organizational State — Social Choice in National Policy Domains*,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Lo, Clarence Y.H. (1992), "Communities of Challeng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Aldon D. Morris & Carol McCurg Mueller eds, Yale Univ. Press: New Haven and London.
- McAdam, Doug, John D. McCarthy & Mayer N. Zald (1988), "Social movements," N. Smelser eds, *Handbook of Sociology*, Sage.
_____ (1996),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framing processes-toward a synthetic, comparative perspective on social movement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 Cambridge Univ. Press.
- McCrthy, John D. (1996),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in adopting, adapting, and inventing," Doug McAdam, John D. McCarthy & Mayer N. Zald,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Cambridge Univ. Press.
- Morris, Aldon D. & Carol McCurg Mueller eds (1992),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Yale Univ. Press: New Haven and London.
- Oliver, Pamela E. & Grald Marwell (1992), "Mobilizing Technologies for Collective Action,"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Aldon D. Morris & Carol McCurg Mueller eds, Yale Univ. Press: New Haven and London.
- Rucht, Dieter (1996), "The Impact of National Contexts on Social Movements Structure: A Cross-movement and Cross-national Comparison," Doug McAdam, John D. McCarthy & Mayer N. Zald,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Cambridge Univ. Press.
- Schwartz, Michael & Shuva Paul, "Resource Mobilization versus the Mobilization of People: Why Conseus Movements Cannot be Instruments of Social Change,"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Aldon D. Morris & Carol McCurg Mueller eds, Yale Univ. Press: New Haven and London.
- Scott, John (1992), *Social Network Analysis A Handbook*, Sage.
- Scott, W. Richard (1995), Organizations — Rational, Natural, and Open Systems, Prentice Hall.
- Wasserman, Stanley & Katherine Faust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 Press.

abstract

The Structure and Activities of Social Justice and Welfare Organizations

Lim, Hyun-Chin* and Sukki, Ko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evelopment of new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in Korea today. Organizations of new social movements interested here include civil organizations for social justice and welfare. The central focus is given to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which determine the types of cooperative activities maintained across various movements, the mechanisms which enforce niches across members, movements, and external environments. Examining these distinguished characteristics of new social movement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the continuity and departure between new and old social movements.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in Korea today confront many difficulties in form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for movement development as the result of economic pressure in IMF system. The success or failure of new social movement depends on how to overcome this challenge. In this regard, movement organizations have to solve such important issues as cooperative activities, radical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movements, overlapping

*Professor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Area: Comparative Sociology, Study of Social Development

Major Publication: *Global Change and Development of Korean in the Global 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98

E-mail: isdpr@prome.snu.ac.kr

**Graduate School of Sociology, Harvard University

Research Area: Political Sociology, Social Movement

Major Publication: "New Social Movements in Korea: With A Reference to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Korean Social Science Review*, Vol. 19, No. 2, 1997(co-work)

E-mail: skong@fas.harvard.edu

and democratization of movements.

The importance of cooperative activities interwoven across various movement organizations must be fully examined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ovements which have both targets to the areas of new and old social movements. Movement organizations also require to promote the capacity and specialization of movements in stead of seeking for a movement hegemony.

Korean path to a compressed risk society needs the rational radicalization of movements. On the one hand, the movements must build up the negotiation power on making policy decisions via successful institutionalization of movements. On the other hand, they must preserve critical positions with the aim for public welfare and justice. Finally, the democratization of movement organization per se is of the utmost importance in giving way to the development of rational movements.